
 금융위원회	<div>보도자료</div>				 금융감독원
	보도	2016.6.27(월) 조간 이후	배포	2016.6.24(금)	

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weight: bold;">책 임 자</div>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           금융위 과장 신 진 창(02-2100-2990)           </div>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weight: bold;">담 당 자</div>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           금융위 금융소비자과 사무관 임 준 빈(02-2100-2631)           </div>
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          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설 인 배(02-3145-5700)           </div>	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           총괄기획팀장 김 호 종(02-3145-5688)           </div>

## 제 목 : 「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」 제정안 입법예고

■ **금융소비** **全过程**(사전 정보제공 - 판매행위 규제 - 사후구제 강화)을 포괄하는 「**종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법체계**」 구축

■ **금융상품** 및 **판매행위** 속성을 재분류·체계화하여 「**동일기능-동일규제**」 체계를 도입하되, **업권의 특수성**도 함께 고려

### 【제정안의 중점 사항】

- ◇ (사전 정보제공) 상품비교·자문·교육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금융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역량·선택권을 제고합니다.
- ◇ (판매 규제)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·체계화하여 회사 스스로 불완전판매 및 과잉 대출 방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.
- ◇ (사후구제 강화) 불완전판매 등으로 손해 발생시,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송분쟁조정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.

## 1 추진 배경

□ 최근 전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금융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추세

- \* ① 영국·일본 등 주요국은 업권 통합법 성격의 금융소비자보호 법체계 기 마련
- ② 미국, 영국 등은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

○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간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 사례\*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등

- \*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, 동양증권 사태 등

○ 아직까지 금융소비자 보호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음

- \* 소비자 보호규제가 업권별로 상이하고 소비자 보호 제도가 관련 개별법에 산재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소비자 보호가 어려움

□ 정부는 이러한 국내외적 소비자보호 요구에 따라 보다 종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(이하 “금소법”) 제정 노력을 지속

○ 하지만, 금소법이 '12년 국회에 첫 제출된 이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됨

- \* 정부는 입법지연에 따른 소비자보호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“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('14.12월)”, “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방안('15.12월)” 등 정책적 노력을 병행

⇒ 최초 정부안 제출 이후의 입법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대 국회에서 금소법 제정 재추진

## 2 입법방향

◇ 금소법 국회 제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난 만큼 그간의 **국회 논의 사항, 정책변화** 등을 종합·반영하여 **정부입법** 추진

### ① (기존 정부안) 국회에서 논의된 정부안('12.7월) 주요내용\*을 반영

\* 사전정보제공(비교공시 등), 판매원칙 위반시 과징금 등 부과, 업무를 위탁한 대리·중개업자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용자 책임 등

○ 다만, **금융소비자보호원(장)** 관련 업무(분쟁조정, 금융교육·비교공시 위탁업무 등)는 **금융감독원(장)**이 수행하는 것으로 대체

※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으로 향후 국회 논의 등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

### ② (국회 논의사항) 강석훈 의원안 주요내용\* 및 19대 국회 합의사항\*\*

\* (소비자보호체계 정비) “금융소비자 정책위원회” 및 “금융교육협의회” 근거 마련 등 (소비자 부담 완화) 대출계약 철회권 및 위법한 계약 해지권 도입 등 (사후 권리 구제 강화) 소비자가 손해배상 청구시 일부요건 금융회사가 입증

\*\*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을 대출계약 성립 이후 3년 이내로 제한(기존안 : 5년 이내), 2천만원 이하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소제기 금지(기존안 : 5백만원 이하) 등

### ③ (정책 발표사항) ‘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<sup>①</sup>(‘15.9월)’, ‘금융 소비자보호규제 강화 방안<sup>②</sup>(‘15.12월)’, ‘자문업 활성화 방안<sup>③</sup>(‘16.3월)’ 등을 금소법 체계에 맞춰 반영

\* ① 제재시효제도 도입, 과태료 부과·징수 업무 금감원 위탁 등  
② 소비자피해 우려시 판매제한, 부가상품 관련 규제 등  
③ 금융상품자문업자를 신설하고 독립자문의 경우 별도로 행위 규율 등

### ④ (기타) 자본시장법에 신설된 클라우드펀딩·사모펀드('15.7월 개정)에 대한 광고 및 적합성 원칙 등 내용 이관

\* 광고 등 판매행위 관련 규제를 기능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금소법 취지 감안

## 3 기본 체계

◇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 속성을 재분류·체계화 하여 “동일기능 - 동일규제” 체계 도입

\* 어떤 유형의 금융상품이든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요소를 걸러낼 수 있는 빈틈없는 규제체계 구축

### ① (금융상품) 금융법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“예금성·투자성·보장성·대출성” 상품으로 재분류

\* 우체국금융, 새마을 금고 등은 금감원 감독·검사 대상이 아니어서 적용 곤란

구 분	개 념	대 상(예시)
예금성	은행 예금과 같이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으로서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	예·적금 등
투자성	펀드와 같이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으로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	펀드 등 금융투자상품, 신탁상품
보장성	보험상품과 같이 장기간 보험료 납입후 장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 받는 금융상품	보험상품 등
대출성	대출과 같이 먼저 금융회사 등에서 금전을 빌려 사용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금융상품	대출상품, 신용카드 등

### ② (판매업자등) 금융법상 금융회사·판매채널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통칭 후 “직판업자, 판매 대리·중개업자, 자문업자”로 재분류

○ 개별법상 판매 채널로 등록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금소법 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간주

구 분	개 념	대 상(예시)
직접 판매업자	대리·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금융소비자에게 직접 금융상품을 판매	은행, 보험사, 저축은행 등 금융법상 금융회사 등
판매대리·중개업자	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중간에서 금융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금융회사의 위탁을 받아 판매를 대리하는 자	투자권유대행인, 보험설계·중개사, 보험대리점, 카드·대출모집인 등
자문업자	금융소비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	투자자문업자

## 4 주요 내용

### 1 금융소비자에 사전 정보제공 강화

◇ **상품비교·자문·교육강화**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충분한 금융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**선택권을 강화**하고 **불완전판매 예방**

#### 가. 금융상품 간 비교 및 판매수수료 공개 : 소비자 선택권 보장 (§26, 37)

□ **금융상품 비교공시\*** 및 **판매수수료 표기\*\***(안내자료 등)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**합리적인 상품 선택**을 지원

\* 현재 업권별로 운영되는 금융상품 비교공시 제도를 통합적·체계적 관리

\*\* 모집인 등 판매업자는 더 많은 수수료를 받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권유할 유인이 높고 소비자는 판매업자 유인구조를 알 수 없어 권유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 감소

#### 나.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: 내실 있는 자문서비스 제공 (§27)

□ 상품 선택시 **일반인들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**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**금융상품자문업 신설**

○ **자문업자가 지켜야 할 소비자보호 원칙\*** 등을 규정하고,

\* 독립 자문업자 여부 등 자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, 자문 금융상품의 범위, 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자문 관련 재산상 이익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

○ 판매업자로부터 “**독립**”된 **자문업자**의 경우, 판매와 자문 간 **겸영 금지** 등 일반 자문업자 대비 보다 **엄격하게 별도 규율**

#### 다. 금융교육 강화 : 소비자 역량 강화 (§35, 36)

① 그간 법적근거 없이 운영된 **금융교육협의회\***의 법적근거 마련

\* (구성) 금융위 부위원장(의장), 관계부처 고위공무원, 금융위원장 위촉자 등 (역할) 금융교육 추진·평가·제도개선 사항을 심의·의결

② 금융위에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의무, 금융소비자의 **금융역량 조사 의무** 등 **다양한 역할**을 부여

## 2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체계 마련

◇ **판매 관련 규제를 강화·체계화**하여 **불완전판매 및 과잉 대출**을 방지하고 **금융회사의 자발적 노력도 유도**

### 가.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강화 및 체계화 (§17~22)

①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**총망라**하여 **모든 금융상품의 판매**에 관한 **6대 판매행위 원칙**을 규정

구 분	내 용	대상 상품
①적합성 원칙	금융소비자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<b>부적합한 상품의 구매권유 금지</b>	모든 유형 (예금성·보장성 상품은 일부)
②적정성 원칙	금융소비자가 <b>자발적으로 구매</b> 하려는 상품이 해당 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<b>적정하지 않을 경우 고지의무</b>	대출성·투자성·보장성 상품 일부
③설명 의무	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주요 내용을 설명	모든 유형
④불공정영업행위 금지	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상품 계약강요, 부당한 담보요구, 부당한 편익 요구 등 금지	대출성상품 등
⑤부당권유금지	단정적 판단 또는 허위사실 제공 등 금지	모든 유형
⑥광고규제	금융상품 광고시 필수포함 / 금지행위 규제	모든 유형

※ 개별 금융법과의 중복·상충 방지 → 금소법 부칙에서 타법 관련조항 삭제

② 특히, **대출성 상품** 등에 대한 **판매행위 규제**를 강화하여 **과잉 대출**을 방지

① 대출성 상품에도 **적합성·적정성 원칙**을 적용

② 대출성 상품의 상품 및 상환방식 **선택권 보장** 등을 위해 **설명 대상**을 보다 **명확하게 규정**

\*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여부·수수료율, 상환방법별 상환스케줄

③ **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유형을 확대** (특정상환 방식 강요 금지)

### 나.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·감독 강화 (§11, 17~22, 48)

□ 대출모집인 등록 근거를 법에 명문화하고, 금융상품판매업자와 동일한 행위 규율을 적용하는 등 관리·감독 강화

\* 현재 대출모집인은 모범규준에 따라 운영 → 위반시 제재근거 없음

○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처럼 적합성 원칙, 설명의무 등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

○ 대출모집인의 위법행위로 소비자에 손해 발생시, 위탁한 금융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부여

### 다. 징벌적 과징금 도입 :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노력 강화 (§62~69)

□ 과징금을 통해 금융회사가 판매행위규제 위반으로 얻은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등 법위반 행위를 강력히 제재

○ 판매행위규제 위반\*시 금융회사 등에 대해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%까지 과징금 부과 (징벌적 과징금)

\* 설명의무 위반, 부당권유행위, 불공정영업행위, 광고 규정 등 위반

※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

### 라.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: 소비자피해 최소화 (§53)

□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구매권유 또는 판매 금지 등을 명령

○ 판매과정에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확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

## 3

## 금융소비자의 과다한 부담을 사전 예방

◇ 대출계약 철회권, 위법계약 해지권 등 도입을 통해 분쟁조정, 소송 제기 이전에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사전적으로 완화

### 가. 대출계약철회권 도입 (§50)

□ 대출계약 후 일정기간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숙려기간 동안 “대출 필요성 재고 및 최적상품 탐색” 기회 부여

○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반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 가능

○ 대출계약 철회시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등(부대 비용 포함)을 반환할 수 있고, 대출정보도 삭제

### 나. 위법계약 해지권 도입 (§51)

□ 금융회사가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해당 계약에 대해서 일정기간(5년 이내) 안에 해지 가능

\* 현재는 소송 등을 통해 계약의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계약은 유효

### 다.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제한 (§20)

□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계약 이후 3년 내 상환하거나 일부 불가피한 경우(타법령 허용시 등)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부과 허용

○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대출 상환을 제약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금지

## 4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

◇ '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- 금융위 - 금감원 - 금융회사'로 이어지는  
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

### 가. “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” 설치근거 마련 (§31~34)

□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대한 기본 정책방향을 결정하고, 정책  
조율을 위한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

\* 구성 : 금융위원장(위원장)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, 금감원장 등

### 나. “금융위”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수립 체계화 (§30)

□ 금융위는 3년마다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할 의무

### 다. “금감원”에 실효성 있는 권한 부여 (§54~57, 37)

※ 당초에는 금소위(금융위 설치법 개정 사항)에서 담당하기로 했으나  
금소법에서 금소위 관련 내용이 빠지는 만큼, 금감원에 권한을 부여

□ 금감원에 판매행위규제 등과 관련한 검사권과 제재권\*을 부여하고,  
금융회사 소비자보호실태평가\*\* 결과 공표 권한도 부여

\* 건전성 감독과 독립적으로 소비자보호 정책을 실효성 있게 수행 가능

\*\*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노력 유도 및 소비자의 금융회사 선택권 제고 가능

### 라. “금융회사”의 금융소비자 보호 자율노력 강화 (§37)

□ 소비자 불만 예방과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해 업무 수행시 준수  
사항을 규정한 “금융소비자보호규준” 마련 의무화

## 5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 강화

◇ 불완전판매 등으로 손해 발생시, 소비자가 실효성 있게 권리  
구제 받을 수 있도록 소송·분쟁조정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

### 가. 소비자 권리구제가 용이하도록 관련 정보제공 확대 (§28)

□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(사본교부를 포함한  
열람권, 청취권 등)을 보장하여 소비자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함

\* 남용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 및 소송수행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한정

○ 금융회사가 금소법에 따라 기록·유지·관리하는 자료에 대해  
소비자가 열람·청취 요구시, 금융회사는 이에 따를 의무

\* 다만, 금융회사는 영업비밀 현저 침해 등의 경우 거절·제한 가능

### 나.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(§38~46)

① 현행 금융위설치법상의 분쟁조정 제도를 금소법으로 이관

② 아울러,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제기\*를 통해 분쟁  
조정 제도를 무력화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

\* 현행 금융위설치법상 조정신청 전 또는 조정과정 중 소제기시 조정절차  
중지 → 금융회사는 불리한 결정이 예상되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 발생

①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 
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 도입

② 금융회사는 2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에 대해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  
되면 완료 전까지 소송 제기 금지 (조정이탈금지)

## 다. 소비자의 소송수행 부담 완화 (§47~49)

- ① 손해배상 소송시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요건 중 일부\*를 금융회사가 입증하도록 하여 소비자 입증부담을 완화

\* 고의·과실 요건 (적합성 원칙, 적정성 원칙, 설명의무 위반시로 한정)

### < 요건별 입증책임 전환 여부 >

- ① 고의·과실 ⇒ 적합성 원칙, 적정성 원칙, 설명의무 위반시 **입증책임을 금융회사로 전환** (금융회사가 고의·과실이 없음을 입증)
- ② 손해액 ⇒ 투자성 상품에 대한 **설명 의무 위반**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, 소비자의 **원금 손실액**을 손해액으로 추정

- ② 대리·중개업자에 대한 **금융회사의 사용자 책임**을 일반원칙으로 규정 → 모집인 등 판매채널의 위법행위에 대해 **회사도 배상책임**

\* 일부 금융법상 규정된 사용자 책임을 일반화하여 모든 판매채널에 적용

- 또한, 업무위탁시 주의의무 외에 **금융회사의 손해방지 노력**까지 면책요건에 추가 → **손해방지 노력을 입증**해야 면책

## 5 향후 일정

-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은 '16.6.28.~8.8. 동안 입법예고 후 규제위, 법제처 심사를 거쳐 **16년 정기국회에 제출**(11월)할 예정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